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530
--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0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-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예우 및 명예선양에 기여하고자 함.
- <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> 및 <한글 맞춤법>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(안 제8조 제1호)
- 나.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(안 제8조제4호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덧붙임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2. 9. 14. ~ 2022. 10. 4.(2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 협의 : 해당 없음

나. 성별 영향평가 : 의견 없음

다. 부패 영향평가 : 의견 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복지사업과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정 함” 을 “규정함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 을 “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 을 “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 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 할” 을 “지원할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“창달” 을 각각 “발전” 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 할” 을 “지원할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권익신장” 을 “권익증대” 로 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조문실시” 를 “조문 실시” 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10만원” 을 “13만원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5만원” 을 “7만원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전단 중 “보훈명예수당 또는사망위로금” 을 “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” 으로, “사람은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, 별지 제3호 서식” 을 “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판명 된” 을 “밝혀진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항제1호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전단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창달”을 “발전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창달”을 “발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의 “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하고 “개인정보보호법”을 “개인정보 보호법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장 조 대 근
	팀장 직위·성명	복지기획팀장 곽 정 란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이 나 연 (5182-1252)

(앞쪽)

[illegible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<u>규정 함</u> 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 <u>규정함</u> -----.
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.	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 <u>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 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	2. 「 <u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 」----- -----
3. 「 <u>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</u> 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	3. 「 <u>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 」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「 <u>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</u> 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	5. 「 <u>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 」----- -
6. ~ 8. (생 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) 시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	제5조(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) --- -----

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<

1. ~ 5. (생략)

6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·재정적 지원

7.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 시설물에 희생·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

8. (생략)

제6조(단체 예산지원)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.

1.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필요예산 지원

2. · 3. (생략)

제7조(복지지원 등)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애국지사의 사망 시 조문 실시

----- 지원할 -----

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발전-----

7. ----- 발전-----

8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단체 예산지원) -----

----- 지원할 -----.

1. --- 권익증대-----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복지지원 등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조문 실시

3. ~ 5. (생 략)

제8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
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
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
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
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,

1. 보훈명예수당 : 1인당 월 10
만원

2. 삭 제

3. (생 략)

4.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
복지수당 : 1인당 월 5만원

② (생 략)

제9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)

① 보훈명예수당 또는사망위로
금,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
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
람은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
제2호 서식, 별지 제3호 서식에
따른 신청서를(주민등록지 동
장)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이 부
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
을 경우 배우자, 부양의무자 등
이 신청할 수 있다. ,

② 삭 제

③ (생 략)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 -

1. ----- 13만원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----- 7만원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)

①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
로금-----

----- 사람은
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
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지급중지의 결정) ① 보훈
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
배우자 복지수당은 다음 각 호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
중지한다.

1. (생 략)

2.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 된 사
람

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
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
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중지는
사유발생 해당 월의 15일을 기
준으로 하고, 16일 이후 중지사
유 발생시는 해당 월까지 지급
한다.

제12조(환수조치) ① (생 략)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
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훈
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
배우자 복지수당을 반환할 사람
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
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
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조(민간의 참여조성) 시장은
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

제11조(지급중지의 결정) ① 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밝혀진 -----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-----

-----.

제12조(환수조치) ① (현행과 같
음)

② ---- 제1항에 따라 -----

제13조(민간의 참여조성) -----

<p>량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<u>창</u> <u>달</u>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<u>발전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4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 청)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 훈문화 <u>창달</u>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 청) ----- ----- <u>발</u> <u>전</u> ----- ----- -----.</p>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 1인당 월 3만원 인상(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)
-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금액 1인당 월 2만원 인상(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:
 - 2023년 연간 추가소요 예산 : $30,000\text{원} \times 3,871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1,393,560,000\text{원}$
-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:
 - 2023년 연간 추가소요 예산 : $20,000\text{원} \times 188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45,120,000\text{원}$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총 소요액	1,439	1,439	1,439	1,439	1,439
보훈명예수당	1,394	1,394	1,394	1,394	1,394
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	45	45	45	45	45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(시비 100%)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장 조 대 근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세 입							
세 출		1,438,680	1,438,680	1,438,680	1,438,680	1,438,680	7,193,400
보훈명예수당		1,393,560	1,393,560	1,393,560	1,393,560	1,393,560	6,967,800
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		45,120	45,120	45,120	45,120	45,120	225,60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1,438,680	1,438,680	1,438,680	1,438,680	1,438,680	7,193,400
	세외수입	1,438,680	1,438,680	1,438,680	1,438,680	1,438,680	7,193,400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관계법령 발췌서

1

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[시행 2017.6.21.] [법률 제14459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 노력 하여야 한다.